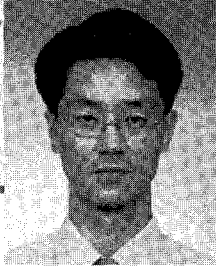


e-Commerce and 미국의 특허전략



특허청 지식정보지원 담당관실 사무관 정성창

특 허권을 경영전략에 도입하는 선구자가 E-Commerce의 CEO라면, 이들의 기업특허전략을 정당화하고, 특허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도화하는 이면에는 지식이 경제성장의 핵심이라는 지식기반경제학자의 경제철학이 깊숙히 스며 있다. 한 걸음 나아가 미국의 연방정부는 이러한 경제학자들의 주장과 논리를 정부 정책으로 실현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다.

지난 1월 하바드 비즈니스 리뷰에는 특이한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의 제목은 지적재산권의 숨겨진 가치라는 제목으로 미국 기업의 특허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특허는 스마트 폭탄과 같으며 더욱 가속화되는 지식 기반 경제하에선 기업들은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전략의 성공 여부가 기업의 생존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특허전략을 구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IBM이며, 그 결과로 1990년도에 IBM의 특허 로열티가 3천만달러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3300%나 증가한 10억 달러에 이르렀다. IBM은 99년 12월 말 기준으로 미국 내 특허가

17,500여개, 전세계적으로 32,000여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 내 전체 인터넷관련 특허 8187개중 11%에 해당하는 903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미국 내에서 획득한 인터넷관련 특허는 15건이었으며 그 중 삼성전자가 13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다국적 기업인 GE, 도시바, 히타치 등은 물론이고 신생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루슨트 테크놀로지, 다우 케미컬, 질레트, 오라클, 아메리칸 온라인, 야후, 등도 미국 내 뿐만 전세계의 특허청에 자사의 특허를 수 개에서 수십, 수 백개 씩 등록해 두고 있다. 이들 경영자들은 특허가 세 가지 측면에서 기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특허는 자사의 핵심기술과 비즈니스 방법을 보호해 줄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과 상품가치를 증진시켜 독점적 시장 구축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

둘째, 특허는 라이선스를 통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이윤을 가져다 주며,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크로스 라이선스를 통하여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는 것이다.

셋째, 특허는 후발 기업이나 라이벌 기업에겐 신규 시장참여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키고 더 나아가 라이벌 기업에겐 견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CEO들이 특허를 경영전략에 도입하는데 열심이라면, 경제학자들은 특허제도와 지속적 경제성장과의 연관성에 포크스를 맞춘다. 특허제도가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주된 이유는 경제성장과정에서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무임승차자를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수단과 연구개발에 투입된 자본을 효과적으로 회수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지식은 특허이외에 논문으로도 발표된다. 그러나 특허와 논문은 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논문 형식으로 발표되는 과학기술지식은 공공재이다. 따라서 무임승차자들은 어떠한 댓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러한 지식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지식에 대하여 무제한의 접근을 허용하던 시기는 미국이 국제 정치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이 경제적 이득보다 더 크다는 판단이 우세하던 냉전시대였다. 과학기술지식은 군사력의 우위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미국이 그러한 지식을 이용하여 어떠한 이익도 추구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거래비용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반전되었다. 냉전은 종식되고 지식의 창출에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제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을 위해서 보다 많은 자금을 연구개발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를 유인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며, 그 인센티브가 바로 특허권에서 주어지는 일시적 독점이라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특허권에서 주어지는 일시적 독점 같은 인센티브가 없다면, 기업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위하여 과학

기술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기술은 진보하지 않게 되어, 생산성은 정체되고 경제는 침체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MIT 대학의 서로우 교수는 특허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서라도 새로이 발명되는 유용한 지식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이나 개인은 보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미개척의 신지식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영업방법특허나 유전자 특허와 같은 것들을 특허화 해주는 배경에는 서로우와 같은 경제학자의 논리에 따른 것이다. 올 2월 카네기 멜런대 경제학부의 코헨과 콜롬비아대의 벨슨은 미국 국가경제연구국(National Bureau Economic Research)에 발표한 논문에서 특허활동을 하는 미국의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러한 증가이유는 특허권으로부터 수익을 얻기보다 후발 기업의 시장진입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하였다. 이런 대목은 원천기술이 일천한 우리기업에겐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며, 이제 더 이상 노동과 자본에 의한 기업성장의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은 더욱 신속히 망하는 지름길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특허가 국가경제성장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침을 깨달은 이상, 미국 정부가 양질의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자국의 다국적 기업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정책을 펼치려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일 것이다. 1988년 연방준비은행(FRB)은 지적재산권과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기술수지 흑자는 88억달러에 달한다고 하였으며, 같은 해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ttee)는 미국의 연간지재권 피해액은 430억에서 610억 달러에 달하며 이러한 금액은 그 당시 미국 GDP의

0.8%에서 1.3%에 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허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정량적 분석에 의하여, 미국은 80년 후반부터 논란이 되어 오던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를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반영시키는 등 특허대상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공격적 특허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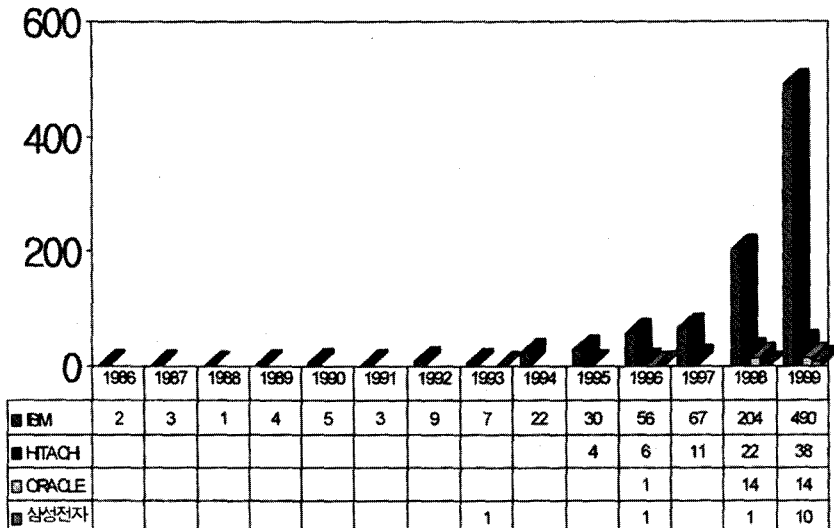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러한 미국의 장기적인 노력에 의하여 특허 보장 년한이 나라마다 15년에서 17년으로 되어 있던 것이 전세계적으로 20년이 된 것이다. 9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의 클린턴이 미국기업들이 우위에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특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선거공약이었다는 것은 미국의 정부가 특허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이제 미국의 다국적 기업은 정부의 가이드 아래

파상적 특허공세를 펼친다. 미국이 전례없는 호황을 누리던 97년, 직원 5천명의 특허청을 책임지고 있는 브루스 레만 청장이 “미국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우리도 적잖은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는 것에 대하여 미국 특허청만의 노력으로 이해한다면 정부간 파트너십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순한 생각이다. 이러한 글로벌 특허전략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정부도 특허시스템을 단순히 특허청만의 몫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범국가적 무형의 인프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아울러 우리 기업의 CEO들도 특허문제를 단순히 변리사나 엔지니어의 몫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 마케팅, 인수 및 합병 등과 접목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전략적 사고를 하여야 한다.

발특 2000 · 06



자료 출처 : 미국 특허청 인터넷관련 특허(1977.1-1999.12)